

기획특집

새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제주의 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훈

새정부의 국정과제는 현실적으로 향후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의 골격형성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들이 구체화되고, 관련사업 및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의 정책적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선진국형 관광산업으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1).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바운드 시장의 빠른 성장 후에는 항상 성장이 정체하는 기간이 있었으므로 1,000만 명 입국에 안주하지 않고 양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질적 발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7).

2013년 2월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는 관광산업 국정과제는 1개 대과제, 7개 세부과제이나 타 부문의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를 포함할 경우 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관광산업부문 국정과제에서도 관광정책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발전으로 압축되며, 관광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관광산업 체질개선 정책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발전연구원, 2013; 20).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산정책, 복지관광 측면에서의 국내관광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관광산업관련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새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주의 관광정책 추진상의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새정부의 관광산업관련 주요 국정과제 내용 분석

1. 관광산업 국정과제

새정부의 관광목표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정책과 질적 성장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 소득증가 등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 고급화,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 노력의 강화가 필요(관계부처합동a, 2011; 5)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 고품격 관광 육성, 소외계층 여행지원 및 인프라 구축, 출입국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MICE 관광과 관련해서는 한국을 동북아 컨벤션의 중심지로 홍보하기 위해 국제회의 중 한국을 대표하는 회의를 발굴하는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19). 또한 한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

망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18). 레저·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항공·해양 등 고부가가치 레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레저스포츠 동호회 대상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국가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두었다(심원섭, 2013). 향후 도래할 여가복지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복지증진차원에서 복지관광을 육성하겠다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셋째,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유자격 가이드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 체결 권고(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이드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의 시장진입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a, 2012; 9).

넷째, 지역관광협의체 설립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전 정부주도의 관광진흥체계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광정책이 실현되는 지역현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관광발전의 혁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심원섭, 2008; 62).

다섯째, 저가관광을 탈피하여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시장에 대해서도 저가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워딩관광, 미식관광, 레저·휴양관광 등 국가별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관광상품개발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2013년 3월 21일 개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동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규 지정 및 취소 요건 강화, 지정횟수 축소 및 갱신제 도입, 무단이탈자 배출 여행사에 대한 벌점 강화, 한중 정부간 공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섯째,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 등 '장애없는 관광환경(barrier-free)' 조성(관계부처 합동b, 2011)에 정책적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인의 입국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Hu-net) 활성화, 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확

대 등 비자제도 개선을 확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2)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박근혜 정부의 관광산업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	세부내용	주요 내용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 등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 홍보마케팅·안내 체계 집중 지원 •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근로자 여행장려제도) 도입 추진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 관광종사원 취업박람회 개최(2013~), 표준용역계약서 제정·보급, 관광통역안내사 공제회 설립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	• 지역 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CVB: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고품격 관광 육성	• 저가관광을 탈피하여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
	소외계층 여행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출입국절차 개선	•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자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 2.

2. 관광산업관련 국정과제

새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국정과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에서 타 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교통인프라 구축, 문화와 연계된 관광산업 육성책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14년~'16년)을 수립하고,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 및 인증제를 개선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관광협동조합 설립,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결합된 농촌관광을 육성하고 농촌에서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013; 17)는 양조장 등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6차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식품 명인이 중심이 되는 체험·전승관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실태조사, 6차 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산업 육성책을 제시하였다. 체험행사 확대를 통해 국내 해양레포츠 인구를 확대하고, 마리나 시설 확충과 서비스업 육성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09. 6 제정)에 의거 수립된 제1차 마리나 기본계획('10. 1)에 따라 '10~'19년까지 10권역 44개소의 마리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바다생태관광, 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치채널 다양화, 복합 헬스케어타운 조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계 전통의약 시장 대표 브랜드 도약을 위한 '한의학 세계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한방 병·의원 해외환자유치 컨설팅 실시를 추진한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1).

여섯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인증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역사·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폐산업시설과 舊군사시설(서계동 등)의 문화·관광 공간 재조성을 통해 산업관광과 다크 투어리즘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2월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관광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견인할 ‘한국형 산업관광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부문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개년 간 (2013~2017)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b, 2012).

여덟째,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을 조성하고, 관광 투자금액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기존 문화도시외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의 문화도시를 추가 선정·지원하고 마을단위의 문화주도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마을 선정·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발전연구원, 2013; 17).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조세건의안은 대부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 일몰기간 연장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성태, 2012).

아홉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의 관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와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 박근혜 정부의 관광산업 관련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	세부내용	주요 내용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비전 및 정책수립, 인프라 지원 •사회적기업 활동 지원, 일자리 창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 및 인증제 개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활성화, 농어촌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식품의 6차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가공·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관광·체험 등 3차 산업화하여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해양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리나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마리나 시설 확충,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

국정과제	세부내용	주요 내용
수산의 미래산업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바다생태관광·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 확장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중증·장기 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채널 다양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해외환자유치 전문인력 양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인증제도 도입 등 추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인디·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	•폐산업시설과 舊군사시설(서계동 등)의 문화·관광 공간 재조성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	•관광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무형문화유산 법률 제정 및 문화재 보호기금 확충	•서원·향교 등 문화관광 자원화 및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대기질 개선	•전기차·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

자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2.

3. 시사점

첫째,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정책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양적 성장 목표에서 외래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재방문 확대, 체류기간 연장, 소비지출액 증대라는 질적 발전 중심으로 전환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7). 다만,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므로 관광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관광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시장다변화 등 양적 성장을 위한 정책에도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관광양극화 해소 및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에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하여 지역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며, 수도

권과 지방 주요 관광목적지와의 네트워크형 관광개발 추진,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관광거점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9-10)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지관광 육성, 무장애 환경(barrier free) 조성 등도 국내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사항으로 고려되어질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은 단일 사업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의 관광산업의 융복합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산학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질적 미스매치 해소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김현주, 2013). 또한 창조관광기업 육성과 지역기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협동조합 설립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책 마련도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이다.

넷째, 융복합형 6대 관광·레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융복합형 관광·레저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운 복용합 대상 관광영역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관광시장에 적용하였을 경우 관광수요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새정부의 관광산업관련 정책과 연계한 제주의 대응과제

1.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 도모

첫째, 새정부는 제주도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제주관광은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광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향후 제주관광비전과 목표, 전략 설정도 이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관광 브랜드 창출과 홍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제주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마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제주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과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 7대 자연경관, 탐사르 습지, 유·무형 문화유산 등의 브랜드를 고양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홍보 마케팅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제주발전연구원, 2013; 23).

셋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관광협의회는 공공부문과 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광관련 사업자 단체로 대표되는 민간부문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위촉직 위원 확대, 분과별 협의회 구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 덤핑상품 판매 등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문화체육관광부, 2011; 15)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 관광시장중 제1위의 시장이 되었으나, 저가여행상품으로 인해 제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제주관광산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중국인 개별시장인 웨딩시장, 미식시장, 레저스포츠 시장 등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과 수용태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관광양극화 해소 및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배려하여 시설은 물론 안내, 정보 등의 소프트적인 측면에서도 무장애 환경(Barrier Free)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안내, 관광정보 등에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하고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장애유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제주탐라문화권 정립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내 마을별 테마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선정,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해 연

구용역을 의뢰 중이나, 대체로 유럽의 문화도시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전북발전연구원, 2013; 18).

3.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첫째, 정부에서 강조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협동조합 설립 모델을 개발하고,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내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민관협력하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 관광, 산업관광, 지질관광, 자연유산, 의료관광, MICE 등 분야별로 전문 인력 풀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고급화, 전문화되는 관광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셋째,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시 제242조(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가 폐지되었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받고자하는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강제조항이 아님으로 인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업종별로 유연성있게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융복합형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첫째, 마리나항 개발의 차질없는 추진과 거점별 해양레저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5개소(김녕, 강정, 중문, 도두, 이호)가 국가 마리나항만계획에 의해 개발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지정 마리나항 개발 대상지역으로 신양항, 서귀포항, 화순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리나항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도내 마리나항들이 요트계류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마리나항 기능을 갖추기 위한 시설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정승훈·김구, 2012; 166). 또한 마리나항과 연계된 주변지역에 거점별 해양레저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관광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도 제36

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2)에서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위주의 산업관광 목적지 확대를 위하여 7대 권역별 산업관광 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우수 '100+α' 한국형 산업관광 자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산업관광 개발 모델, 산업유산 개발 모델, 민간참여 개발모델 등 3가지 산업관광 육성모델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민간참여 개발모델시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관광자원의 범주를 구분해 산업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이나 산업유산들에 대한 조사 및 DB화, 제주관광홈페이지에 산업관광시설 코스 소개, 산업관광 해설사 양성 등을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제주의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 지정된 의료관광 선도병원을 중심으로 선도의료기술 발굴이 필요하며, 양한방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중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사·전통문화체험과 관련해서는 제주문화와 역사자원의 관광콘텐츠화, 스토리와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요소와 창조역량을 고양해야 한다.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의 활용방안 모색,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돌염전'과 '해녀유산', 제주전통 굿 등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숲 교육·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산림복지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유아숲체험원(5개소), 산림교육센터(3개소), 치유의 숲(19개소), 자연휴양림(21개소) 등 산림복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따라서 힐링관광과 연계한 치유의 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확대하고, 체험마을·관광농원 등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등급제 시행, 1사1촌 등 농촌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17). 도내 농촌체험마을·관광농원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1사1촌 장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새정부의 제주지역 공약중 말산업 특구 지정 및 특화단지 조성

관련된 승마관광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승마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승마관광 사이트 개설, 말 테마마을 조성, 고급형 체험 승마장, 기 조성된 임도길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승마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크루즈관광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2년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140,670명이며,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137,722명으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170회, 35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루즈 전용 선석 확대, 제주외항에 크루즈터미널 조기 조성, 제주외항 부근 편의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들이 대부분 관광코스에 포함된 면세점(롯데, 신라)에서 주로 쇼핑을 하고 있어 지역상권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확대, 계절별로 특색있는 체험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IV. 맺으며

새정부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토대로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복지관광 육성, 관광일자리 창출, 고품격 관광 육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새정부의 국정과제는 현실적으로 향후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의 골격형성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염돈민·이원학, 2013).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들이 구체화되고, 관련사업 및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제주 지역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의 정책적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부처와 연계된 복용합 관광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JDI**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a(2011),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4월 27일자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b(2011),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논의 결과」, 7월 27일자 보도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2),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교통편의 및 안전제고 대책을 강구」, 11월 14일자 보도자료.
- 김태영(2013), “박근혜 정부의 관광분야 국정과제와 경남의 과제”, 경남발전지 제125호, 경남발전연구원.
- 김현주(2013),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의 해법과 과제,” 웹진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월호.
-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3년도 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1),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a(2012), 「공정하고 품격있는 관광서비스 대책」.
- 문화체육관광부b(2012),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건인할 ‘한국형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12월 12일자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근본적 개선책 토론,” 3월 21일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복지 주요정책 추진방향」.
- 심원섭(2008), 「지역관광파트너십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심원섭(2013), “새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과제,” 웹진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월호.
- 염도민·이원학(2013), 「박근혜정부와 강원발전」, 정책메모 제235호, 강원발전연구원, 2. 28.
- 이성태(2012),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북발전연구원(2013), 「박근혜 정부 출범과 전북의 대응과제」, 이슈브리핑 Vol.102, 3.18.
- 제주발전연구원(2013),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의 현안과 대응과제,” JDI focus No.160.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정승훈·김구(2012),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외래관광객 1,000만명 돌파, 그 의미와 과제」, 가치와 전망 제10호, 11. 20.